

# 그는 왜 오지 않았나? 회계단체와 소통 거부한 尹

〈회계사회 신년인사회〉

회계 개혁보다 ‘종합검사 부활’ 예고  
소비자 주력… 종합적 시각 아쉬워  
금융업계·금융위와 대립각 세워

윤석현 금감원장은 최근 ‘종합검사’ 부활을 예고하며 금융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회계 개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장사들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회계 기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원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 각계각층이 함께한 자리에 윤석현 금감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금감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의 회계에 대한 인식 정의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작해 도입 원년을 맞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지정감사제, 표준감사



윤석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시간제 등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지정감사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이 9년 중 3년을 주기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제도다. 또 표준감사 시간제는 일정 시간 이상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외감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부 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에 회계 비용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도 2016년 당시만 해



지난 9일 열린 ‘2019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왼쪽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대한변호사회 협회장,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도 상장사협의회는 “지정감사제 전면 실시는 감사인의 잊은 교체로 기업은 많은 비용과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회계업계에 힘을 실어준 것은 금감원이다. 금감원은 자유수임제 기반인 외부감사인(회계법인) 선임제도에 지정감사제 요소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형가치 자산화’에 대해 회계업계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시발점은 금감원의 ‘바이오 감리’였다. 하지만 무형

가치 자산화에 대해 바이오 기업들은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산화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 의견(MD&A) 공시제도는 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의 역할은 기업과 회계업계의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업계는 전방에 나와 기업과 대립각을 세우며 회계 투명성 강화 이슈를 끌고 나가고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뒤로하고 ‘소비자 보호’에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와 반기업적 시각은 금감원장의 자질이 될 수 없다.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특정 영역만 살펴보던 것을 종합검사로 전환해 업무 영역 전체를 진단하겠다는 것. 종합검사 폐지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삼성증권 배당 오류 등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터져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쉽게 사지 못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와 대립각만 세우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검사 부담이 크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와 의문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키코사태 재조사, 노동이사제 도입 등 주요 현안마다 관련업계 및 금융위와 부딪히고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서울 재건축 시총 3.5兆 급감

文정부 고강도 9·13 대책 효과

지난해 고공행진하던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가총액이 3조원 이상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꾹하는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양새다.

13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계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63조866억원으로 역대 최고점인 지난해 10월(166조6222억원) 대비 3조 536억원 줄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165조 4614억원에서 10월에는 166조6222억원 까지 올랐다. 앞서 대책 이전에 올랐던 호가가 통계상 10월까지 반영되며 시가총액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며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속속 나오자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164조7110억원으로 시총이 하락했다. 이어 12월에도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의 약 91%를 차지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

구가 시가총액 하락을 주도했다.

작년 말 기준 강남 4구의 시가총액은 149조1021억원으로 10월 고점(152조 7747억원) 대비 3조6726억원이 감소했다. 서울 평균보다 감소액이 큰 것이다.

구별로는 서초구의 재건축 시가총액이 지난해 10월 37조9532억원에서 12월에는 35조9824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강남구의 시가총액은 74조6374억원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1조29억원이 줄었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10월 대비 3775억원, 3214억원이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강남권의 대규모 초기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작년 9·13 대책 이후 매수세가 끊기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대비 시세가 2억~3억원 이상 하락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8㎡는 지난해 최고 18억5000만원에 매매됐으나 현재 15억2000만~15억8000만원 선으로 3억원 가량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도 지난해 9·13 대책 전 19억1000만원까지 팔렸으나 현재 16억5000만~17억원에 호가하고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中企 R&D, 투자 늘렸지만 대기업과 격차 ↑

영세성 심화·개방형 활동 미흡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 이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 늘고, 86.9%가 자체개발 형태로 R&D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R&D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1곳당 연구개발비 비중은 2007년 당시 2.4%에서 2017년 현재 1.3%로, 기업 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 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26.6%에서 21.9%로 각각 벌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3일 폐낸 ‘중소기업 R&D 투자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R&D 영세성은 심화되고 개방형 혁신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기준 13조691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 늘었다.

연구원수도 17만3168명으로 최근 10년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간 매년 7.6%씩 증가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 연구원 수가 대기업보다 많아졌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3.52%(2017년)로 대기업(3.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2014년 당시 3만748개에서 3만6026개(2016), 3만8644개(2018년 11월)로 각각 늘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연구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4.7%→95.7%→95.9%로 증가했다.

R&D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질은 그렇지 못했다. 중소기업

1곳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3억4000만원 대기업의 1.3%에 불과하다. 또 연구원 1인당 평균 연구개발비는 7910만원으로 대기업의 27.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 1곳당 평균 연구원수도 4.3명으로 대기업의 4.7% 수준이다.

2014년 대비 지난해 11월 현재 5인 미만 연구소 비중은 59.1%에서 67%로, 10인 미만 연구소는 91%에서 93.2%로 오히려 늘었다. 영세성이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역시 2015년 당시 35위에서 지난해엔 40위로, 산학간 지식전달 정도는 같은 기간 22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김승호 기자 baha@

## 삼성의 新인터페이스 ‘원UI’ 구현 관심

》 1면 ‘애플 앞마당서…’서 계속

삼성전자는 지난해 삼성개발자컨퍼런스(SDC)에서 갤럭시 A8S에 인피니티-O 탑재를 예고한 바 있다.

원UI가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거리다. 원UI는 삼성전자가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인터페이스다. 흄이나 뒤로가기 등 버튼이 없어 한 손으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원UI는 터치가 아닌 몸짓을 이용하는 ‘제스처’ 기능을 적극 탑재할 것으로 기대를 모운다. 안드로이드 파이가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하면서, 원

UI는 제스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애플은 아이폰 X부터 제스처 기능을 도입했지만, 실제 활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특히 원UI는 폴더블폰 성공 여부를 가르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폴더블폰 출시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기존 인터페이스로는 활용이 극히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원UI로 폴더블폰 성능을 최대한 이끌어 낼 해법을 제시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 이달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000원 올라

이달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0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율(2018년 1~10월)은 11만 3111원에서 11만 7058원으로 3947원이 올라

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 4012원으로 3170원이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7.38%에서 8.51%로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특

히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5.9%)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에 따른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초음파·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의료체계를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주 기자 hja89@